

신 사회운동의 관점에서 본 유럽과 동북아시아의 핵에너지 갈등의 국제적 비교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중심으로*

김성지**

(조선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물질의 위험성에서 비롯된다. 이 갈등의 주체는 핵 에너지를 걸정한 정치 및 경제체제와 이를 반대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 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시 다국적 반핵단체가 갈등 주체로 나타난 다. 우리는 이러한 국내적·초국가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른 다. 체계이론적인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사회에서 돈과 권력과 같은 “상징적 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집단적·공세적 자기관계의 전개라고 할 수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동북아시아와 유 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해서는 별 차이가 없었다. 동북아시아 에서 대만이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고 했을 때 국제적 갈등이 일어났다. 유럽 에서 독일은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과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의 문제로 큰 갈등을 겪었다. 신 사회운동이 저항하고 있는 패러다임은 상태학 적 지속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전지구적 세계상이다.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 지 갈등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한 “하위정치” 를 통해 해소되고 있다.

키워드: 모험사회, 신 사회운동, 모험 커뮤니케이션, 핵에너지, 세계모험사회, 담론 동맹, 하위정치

* 이 논문은 1998년도 조선대학교 학술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 sjckim@chosun.ac.kr

1. 서론

최근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험 커뮤니케이션’의 실제적 상황은 원전에서 배출한 핵폐기물 저장소를 선정하는 데 임해 지역 주민들 및 환경운동 단체와 핵에너지 관련 기관들(산업자원부, 폐기물시설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간의 첨예한 대립 현상이다. 그 결과 핵폐기물 시설 유치 지역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대대적 홍보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반발 때문에 그 동안 어떤 지방자치단체도 핵폐기물 저장소를 유치하겠다고 선뜻 나서지 못했다. 또한 이제 우리의 핵에너지 갈등도 선진국에서처럼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보다는 핵폐기물 처리 문제의 차원으로 한 단계 상승했다. 지난 1990년 안면도와 1995년 굴업도(인천 주민 포함)에서 해당 주민들은 엄청난 희생을 치르면서 핵폐기물 시설 건설계획을 백지화시킴으로써 핵에너지 갈등을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시켰다. 2003년 7월 전북 부안군 위도로 결정된 핵폐기장 건설 계획은 약 5개월 동안 자녀들의 등교거부, 단식투쟁, 삼보일배 운동, 촛불시위 등의 저항운동이 보여주었듯이 부안군민과 반핵단체의 강력한 저항을 받았고, 2004년 2월 14일 자율적인 주민투표에서 절대적인 반대로 완전히 백지화되었다.

핵에너지 특유의 모험들에는 (모험의 원천에 따라) 우라늄 농축, 연료봉 제작공장,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중간 저장, 핵폐기물 운송, 폐연료봉 재처리(사용 후 연료 처분) 그리고 폐기물 최종 저장 등이 있다(Peters, 1990). 이러한 모험들 중에서 핵폐기물의 운송, 폐연료봉 재처리, 핵폐기물 최종 저장은 방사능 물질로 장기간 대규모의 대기오염, 토양오염, 그리고 수질오염을 야기하고, 백혈병과 각종 암 등 인간건강에 치명적인 피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러한 위험들이 폐기물을 배출하는 국가의 경계를 넘어 타국에까지 뻗칠 때 국제적인 저항운동이 일어나는 것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다.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로서 1996년 프랑스의 라아그(La Hague)에서 사용 후 연료가 재처리되어 추출된 플루토늄이 일본으로 운송될 때 그린피스는 프랑스에서 일본까지 수송선을 추적하여 40개국 이상의

주변국가에 이 선박의 위험성을 알렸다. 1997년에는 ‘죽음의 섬’이라고 불리는 대만의 란유(Lanyu) 섬에 임시 저장된 핵폐기물의 복한 수출 계획이 남한 환경단체들과 그린피스의 강한 저항을 불러일으켰다. 1992년 이후 대만과 남한과의 외교적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남한 정부는 이 계획에 반대하는 어떤 조치도 취할 수 없었다.

2001년 현재 ‘반핵국민운동’(2001) 자료에 따르면 동북아시아에서는 78기의 원자로(일본 53, 남한 16, 대만 6, 중국 3)가 가동 중이며, 15기의 원자로(일본 4, 남한 4, 중국 7)가 건설 중이고 1기의 원자로(일본)가 폐기되었다. 유럽에는 현재 149기의 원자로가 가동 중이고, 4기의 원자로가 건설 중에 있으며, 44기의 원자로가 해체되었다. 이러한 핵발전소들에서 배출되는 핵폐기물은 현재 양 대륙에서 국제적인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 무엇보다도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매체”는 ‘갈등(Konflikt)’으로 정의되는 저질의 커뮤니케이션, 곧 ‘아니오’라는 대응(저항)을 통해 체계를 방어하고 유지하려는 ‘면역체계’(김성재, 1998, 63쪽)를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경향은, 곧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는 사회운동을 촉발시키는 기폭제로 작용한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유럽에서는 유럽연합(EU)과 같은 구속력 있는 합의 기구가 존재하지만, 동북아시아에서는 정치적 협의 태세의 부족으로 그러한 기구의 탄생을 아직 기대할 수 없는 실정이다. 그러나 오늘날 핵에너지를 둘러싼 국내·국제적 갈등은 “위로부터의 세계화”(Beck, 1996)라고 할 수 있는 국제적 조약이나 UN의 중개 형식보다는 반핵 환경단체나 그린피스 등 국내·국제적 사회운동을 통해 해결되는 추세다. 이러한 사회운동은 핵에너지에 대한 철학적, 사회학적 그리고 커뮤니케이션학적 패러다임에 의해 추동되고 전개된다.

1986년 체르노빌 대재앙 이후 핵에너지의 모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은 국내외적으로 핵에너지 갈등과 관련해 언론학의 중요한 주제로 떠올랐다. 이른바 ‘모험/위험 커뮤니케이션(risk communication)’ 연구가 우리나라에도 상륙했다(김성재, 1996; 이정춘, 1996; 페터스·송해룡, 2001). 유럽의 핵에너지 갈등과 관련,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다룬 기존 연구 동향을 보면 전문

가와 반대 전문가의 관계(Kemp, 1993), 전문가와 정치가의 커뮤니케이션(Luhmann, 1991), 공중과 전문가의 커뮤니케이션(Peters, 1991; Ruß-Mohl, 1991), 대중매체의 역할(Kepplinger, 1991; Ruhrmann, 1991, 1996),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갈등해소(Peters, 1990), 대중매체 수용자의 기술 수용용의(Noelle-Neumann & Hansen, 1991; Peters, 1991) 등이 있다. 이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기본적인 논증전략은 핵기술의 안전에 대한 철학(Radkau, 1989), 모험의 사회학(Beck, 1986; Luhmann 1991; Bonß, 1995)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技術化)(Japp, 1993) 등이다.

이 연구는 핵발전소가 (타 대륙과 비교해) 밀집된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일어나고 있는 핵에너지 갈등을 비교하고, 이러한 비교를 통해 전지구적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는 시도다. 따라서 본 연구는 현대 사회의 적절한 자기묘사로서 “커뮤니케이션에 대항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저항(Widerstand von Kommunikation gegen Kommunikation)”인 ‘신 사회운동’(Luhmann, 1998, pp. 847-865)이 어떻게 핵에너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지를 조명해 본다. 그래서 본 연구는 첫째, 핵에너지 갈등에서 나타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와 신 사회운동의 본질을 체계이론적 측면에서 알아보고, 둘째,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핵에너지 갈등의 양상을 살펴볼 것이며, 셋째, 모험 커뮤니케이션의 관점에서 신 사회운동이 핵에너지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있는지를 추적해 본다.

2.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와 신 사회운동

핵에너지를 둘러싼 갈등은 이 분야의 선진국인 유럽에서 시작되어 동북아시아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갈등의 전개방식 또한 동서양의 전통적·문화적 차이를 넘어서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 19세기 중반 이후 서양의 문물이 동양에 유입될 때만 해도 동양인들은 동도서기(東道西器)의 입장을 취했다. 이는 서양의 기술은 받아들여되 동양의 정신은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으로서 기술문명을 바라보는 동서양의 가치관 차이를 나타낸다. 하지만 핵에너지처럼 기술문명의 보편화가 이루어진 현대사회에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권력이나 돈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Kim, 1998, 59-61쪽)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이 기능적으로 전문화될 때 그러한 차이는 점차 없어지는 추세다. 이른바 체계이론에 등장하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를 통해, 곧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의미제안의 수공)을 위해 돈과 같은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에 의해 커뮤니케이션이 선택적으로 조종됨으로써 사회적 맥락(예: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에 대한 규범적·도덕적 논쟁)은 극단적인 이원(二元)코드(예: 돈의 지불 가능성/불가능성)에 의해 상실된다(Japp, 1993).

기능적으로 차별화된 사회에서, 곧 전문적인 역할 분담이 이루어진 사회에서 이원적 코드화는 극단적인 단순화(사회적 맥락 상실)를 통해 역설적으로 고도의 복잡성을 낳는다. 이는 커뮤니케이션 매체(특히 돈과 권력)로 대표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가 탈개인화(脫個人化)되지만, 개인적인 정체성이 계속 유지될 때 역동적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기능적인 차별화’(Luhmann, 1986)의 개념은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첫째, 기능 체계들은 스스로 내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추상화(일반화)시

-
- 1) 파슨스(Parsons)의 AGIL-도식(작용/경제, 목적달성/정치, 통합/사회공동체, 잠재적 패턴유지/문화체계)에서 교환을 매개하는 돈, 권력, 영향력 그리고 가치구속력의 네 가지 교환매체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교환매체(symbolically generalized media of interchange)”라고 불린다. 여기서 상징은 기호(記號)와 같은 의미를 갖는다. 루만(Luhmann)은 이 개념을 더욱 확장시켜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symbolisch generalisierte Kommunikationsmedien)”라고 부르고, 이 매체는 커뮤니케이션 파트너들의 차이를 건너뛰어 한 파트너에 의해 제안된 의미를 다른 파트너가 수공하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 매체는 돈, 권력, 영향력뿐만 아니라 진리, 사랑, 기본가치 등을 일컬으며,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의견불일치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성공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조건지우는 매체다.

킨다.

둘째, 기능적으로 특수한 커뮤니케이션은 체계관계들이 수평적으로 분산됨으로써 이질적으로 된다.

셋째, 사회의 기능 체계들은 사회적·개인적 관계의 무차별성을 생산한다.

수많은 코드 고유의 체계관계들은 역사적으로 확실성을 보장받았던 질서의 원칙들(도덕, 철학, 종교 등)을 해체하고, 위계질서적 혹은 직선적인 행위의 사슬들(집단적으로 전수된 사회적 규범, 르네상스 이후 유럽의 자연법과 이성, 아시아의 유가·도가사상 등)을 회소가치의 대상으로 만든다. 이로써 하버마스적(Habermas, 1987) 의미의 사회통합적·합의지향적 행위의 기회는 사회적으로 지배적인 기술화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에 편입되고 만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커뮤니케이션 체계로서 사회체계의 내부 구조를 이루는 의식체계(심리체계)에도 존재한다. 한편으로 의식체계는 사회적인 환경의 조건들 하에서만 존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조건들을 선택할 때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측면들, 즉 추상성/이질성/무차별성에 부딪힌다. 이러한 의식체계, 즉 개인의 정체성은 자기묘사(자기표현)로 구성되어 있을 때만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는 메커니즘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자기관계와 타자관계, 즉 개인적인 정체성과 사회적인 정체성의 지속적인 상호작용이다.

의식체계의 자기묘사는 개인, 역할, 행위 프로그램 그리고 가치관과 관련해 조직될 수 있다. 역할과 행위 프로그램은 추상적/이질적/무차별성을 포함한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다원적 가치가 보장되는 사회에서 의식체계의 자기조건(정체성 창조)은 자유로워졌을 뿐만 아니라, 임의적이고 우연적이라는 사실이다. 이 문제는 의식체계에 필요한 자기관계적 정체성 형성의 과정이 개인적 및 사회적 정체성의 모험적이고 지속적인 결합을 시도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사실이다. 여기서 자기관계는 자기 자신과의 순환적인 관계를 의미한다. 즉, 동어반복적인 폐쇄성("나는 나다")이다. 그렇다면 사

회적(또는 국제적) 타자관계가 일정하지 않고 오직 추상적/이질적/무차별적인 관계들을 점증시킬 때 이러한 자기관계는 어떻게 전개될 수 있을 것인가?

근본적으로 심리적 체계(의식체계)는 이 문제에 대해 폐쇄(방어적) 혹은 개방(공세적)을 통해 반응한다고 생각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심리적 체계의 순환적인 자기관계에 머물러 있고, 사회적인 환경과의 접촉은 파벌형성처럼 다른 의식체계와 협력 없이 일어난다. 후자의 경우 타인들과 함께 하는 타자관계의 조직화, 즉 집단적인 자기관계의 전개가 관건이다. 그래서 사회적인 환경과의 접촉은 집단적인 조직을 통한 공세적인 자기묘사로서 기술화된 커뮤니케이션에 대항하는 커뮤니케이션의 저항인 “신 사회운동”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관계는 체계의 유형(개인적/집단적)과 외부표출전략(방어적/공세적)에 따라 <표 1>과 같이 묘사될 수 있다.

<표 1> 자기관계의 전개 전략

체계 유형 외부표출 전략	개인적	집단적
공세적	자기성찰적 주관주의	신 사회운동
방어적	가치관 혼란/일탈	파벌 형성

출처: Risiken der Technisierung und die neuen sozialen Bewegungen(p. 382), by Klaus P. Japp, 1993, Bechmann, Gotthard (ed.), *Risiko und Gesellschaft*(pp. 375-402).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이러한 공세적인 자기묘사로서 신 사회운동은 과거의 대표적인 사회운동인 노동자 운동과 달리 약하게 구조화되고, 유동적이며 개방적인 성격을 띤다(Raschke, 1987, p. 412). 곧, 신 사회운동에는 통일되고 폐쇄적인 이데올로기가 존재하지 않으며, 다양한 주제와 이슈의 빠른 변화가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운동은 강력한 리더 중심의 관료조직과 거리가 먼 유연하고 분산적인 조직에 의해 이끌어지며, 직접적인 행위를 할 때 행위양식의 다양성과 자율성이 보장되지만, 네트워크로 강하게 연결된 사회운동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핵에너지 갈등, 곧 반핵운동은 개방적·자율적이며 유연한 조직에

의해 이끌어지며, 핵폐기장 부지선정과 같은 특별한 이슈가 강한 네트워크를 통해 해결되면 그 조직이 해체될 수 있는 단기적 사회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신 사회운동에서는 크게 두 가지 전략이 사용된다. 우선 종교적·문화적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공포 커뮤니케이션(예: 방사능은 “죽음의 빛”)이 있다. 신 사회운동은 공포 커뮤니케이션의 선택적인 전개를 통해 심리적 체계의 사회적 자기묘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형식이다. 공포는 모든 순수이성 비판과 맞서 있는 현대적인 선협(先驗)으로서 정치체제나 경제체제와 같은 기능체제에 의해 통제될 수 없고, 모든 기능체제들에 대해 안정장치를 가지고 있으며, 공포 커뮤니케이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도 반증할 필요 없이 공포를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이다(Luhmann, 1988, pp. 239-240). 따라서 한 사회의 내부와 외부에서 기능체제들을 관찰하고 묘사하려고 하는 커뮤니케이션에서 공포의 주제는 매력적이다. 그 결과 공포는 일반적으로 사회체제에서 일종의 방해요인으로 작용한다.

다른 전략으로는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는 삶의 기회의 집단화(공동선: 평화/건강/환경 등)가 있다. 기술화된 커뮤니케이션 체계에서 볼 수 있듯이 핵에너지 분야에서 사회적 맥락을 증성화시키는(사회적 맥락이 상실된) 모험 평가가 지배적이다(예: 비용과 효용의 맥락). 곧, 기술화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경제적 지불의 커뮤니케이션(돈 거래)에 맞는 모험 평가가 일반적이다. 예를 들면 핵발전소를 가동하는 기업은 이 발전소로 인한 대재앙의 잠재성과 같은 사회적 맥락을 고려한다면 핵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을 것이다. 고도의 모험적인 영역에서 지불의 커뮤니케이션을 고수하려면 모험 평가는 통계적·경제적 수단을 통해 기술화되어야 한다. 즉, 사회적 맥락이 증성화되어야 한다. 그러나(결정의 과정을 통한) 제도적 ‘모험’ 지배와, 곧 자기 결정에 의한 피해의 생산과, 기술적으로 조건지어진 ‘위험’의, 곧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고 당하는 피해의 차이에서 비롯된 모험과 위험의 차이(Luhmann, 1986, 1988, 1990a, 1991; Thompson & Schwarz, 1990)는 ‘이중의 사회(dual society)’를 낳는다. 곧,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감수하는

사회와 타자의 결정에 의해 피해를 입는 사회를 만들어 낸다. 그러한 사회에서는 도구적, 목적 지향적, 양적인 목표를 겨냥한 사회적 제도의 합리성과 기술의 결과에 의한 불확실성(불신)에서 유래하는 모험 회피의 합리성이 서로 대립된다. 후자는 비전문가들의 합리성이다. 신 사회운동에서는 이 두 가지 합리성에서 유래한 모순을 커뮤니케이션함으로써 갈등을 확산시킨다.

이제 문제는 이러한 갈등이 맥락이 상실된 결정의 체계를 제한시키는 데 충분한지 불충분한지를 따져보는 것이다. 결정 체계의 제도적인 측면은 높은 결정의 합리성을 창출하는 데 반해, 신 사회운동은 행위의 합리성을 창조한다. 전자는 (결과의) 불확실성을 창조함으로써 성공의 기대를 최소화시켜 그만큼 제도화된 모험 결정자들의 행위욕구를 감소시킨다. 후자는 인지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성공의 기대감보다는 가치구속력(commitment)²⁾에 더 의존적이고, 이 구속력을 이데올로기적인 수단으로 확보하거나 강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양자는 다시 기술과 맥락의 차이에 도달한다. 사회의 기술화된 기능체계들 내에서는 기술화를 통해 어떤 정체현상도 허용하지 않는 선택의 상승이라는 전략들이 지배적이다. 이 전략들은 자신을 스스로 구속시킬 수 없다. 여기에 내재하고 있는 통제 불가능한 모험 생산에 결정의 절차들이 대립한다. 이 절차들은 모험을 회피할 때 고도의 합리성 수준을 발전시킴으로써 행위를 저지하는 방식으로 작용한다. 이에 반해 내적(삶의 기회) 및 외적(모험) 자기구속에 지향된 신 사회운동은 결정의 합리성에 결함이 보일 때 (예: 지진에 취약한 활성 단층이 확인된 곳에 핵폐기물 저장소를 건설하려는 결정을 내릴 때) 높은 행위태세를 발전시킨다. 결국 상반된 위치에 있는 행위자들은 전략적으로 막다른 골목에 이른다. 일군의 행위자들은 발동하지만, 그들의 행위는 부족한 결정의 합리성(전문성) 때문에 사회적으로 파소 평가된다. 다른 행위자들은 고도의 결정의 합리성을 발전시키지만, 그들은 충분한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한편으로는 관찰(이것 아니면 저

2) 파슨스(Parsons)가 구상한 가치구속력(commitment)은 어떤 행위자가 비협조적이고 도덕을 불이행할 경우 부정적인 보상, 곧 비난과 처벌을 요구하는 “상징적으로 일관화된 교환매체”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Parsons, 1980, pp. 147-149).

것을 결정하는 것)³⁾이 작동(행위)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반대로 작동이 관찰을 막는다. 그러나 이는 ‘모험사회’⁴⁾를 특징짓는 것으로서, 모험사회는 행위의 합리성과 결정의 합리성이 모순적으로 작동함으로써 자기마비의 경향을 띤다. 따라서 사람들은 항상 신 사회운동의 분산된 행동이 야기하는 ‘지체와 마비(delay and paralysis)’의 경향을 질타하기도 한다. 때로는 이러한 행동이 국가 또는 지역이기주의로 표현됨으로써 세계발전 혹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
- 3) 루만(Luhmann, 1990b, pp. 68-121)의 체계이론에서 ‘관찰’의 개념은 인식론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식’의 개념을 대체하는 개념으로서, 한 체계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긍정/부정의 가치로 이루어진 이원코드의 차별기준(contrast-sets, 예: 과학체계에서 진리/허위, 경제체계에서 지불가능성(부)/지불불가능성(빈), 정치체계에서 여/야, 교육체계에서 우/열, 의료체계에서 병/건강 등) 중에서 하나의 가치를 반복적으로(re-entry) 선택(결정)하는 것이다.
- 4) 벡(Beck, 1986, 1988, 1991)이 주장하는 ‘모험사회(Risikogesellschaft)’는 루만(Luhmann, 1986, 1988, 1990a, 1991)의 ‘모험(Risiko)/위험(Gefahr)’ 개념을 적용한 표현이다. 태풍, 해일, 지진 등과 같은 자연재해는 원시사회에서나 현대사회에서나 인간에게 위협한 존재다. 인간은 예나 지금이나 ‘위험사회’에서 살고 있는 것이다. 산업사회의 부작용인 기술의 피해는 겉으로 보면 기술정책입안자(결정자)로 참여하는 정치가와 전문가들이 결정한 결과 나타난 인위적인 재난으로서 ‘모험’이다. 한편 기술의 부작용은 정책결정 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비전문가들(소비자들)이 당하는 기술의 피해로서 ‘위험’이다. 현대사회는 이 예측하지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미래의 피해를 예측하지 못한 채 누군가가 계속 결정해 나가야 유지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 결정 주체에 의해 형성된 사회라는 의미에서 ‘모험사회’로 정의될 수 있다. 이 피해는 결정하는 주체의 의지에 따라 방지될 수도 있다는 논리가 ‘모험사회’ 논의의 발단이 되었다. 모험사회의 논의가 계속되면 결국 모든 사람들(예: 결정에 직접 참여하지 않은 익명의 소비자들)이 결정자로 귀착되고 만다(결정자를 색출하지 못하고 모두에게 피해의 원인이 돌아가는 집단적 무책임성). 예를 들면 전기 대신 촛불만 사용하는 소비자만 있다면(화석연료 발전소 역시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회피될 것이고) 핵발전소를 건설해 폭발위험과 핵폐기물의 방사능 오염은 없어질 것이다. 결국 현대사회에서 새롭게 나타난 재난은 인간의 결정에 의한 인위적 산물이기 때문에, 이 피해를 인간의 의지로 방지할 수 있다는 구상에서 출발할 때, ‘위험사회’보다 ‘모험사회’가 더 정확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 사회운동은 모험을 회피한다는 목적을 가지고 적절 한 자기묘사로서 전개되는 모험 '결정자들'의 커뮤니케이션에 대항하는 피해 '당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저항이다. 이러한 반영(사)적인 커뮤니케이션은 상호간의 공진(resonance)을 유발함으로써 사회를 통제할 수 있다(김성재, 1998, 76-79쪽). 예컨대 핵폐기물에서 나오는 방사능 처리의 모험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주체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공진을 일으킬 수 없다. 다시 말해서 사회는 환경에 대해 민감하지만, 그 작동에 있어서는 폐쇄적이기 때문에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관찰·통제될 수 있다. 또한 신 사회운동은 기술화된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폐쇄성을 깨는 거절의 커뮤니케이션, 곧 상대방의 커뮤니케이션 의미 제안에 대해 '아니오'라는 대답을 통해 체계를 방어·유지하려는 '면역체계'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갈등'을 묘사한다. 따라서 신 사회운동은 모험의 피해를 제거한다는 기대감으로 모험을 낚는 '결정자'와 이 결정자에 의해 위협에 노출된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모험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되는 '모험 커뮤니케이션(Risikokommunikation)'이라고 할 수 있다(김성재, 1996, 95-98쪽). 이러한 맥락에서 이 논문의 주제인 핵에너지 갈등은 방사능 모험의 피해를 낚는 자들을 겨냥한 피해 당사자들의 저항적 자기묘사로서 신 사회운동이자 모험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정의된다.

3. 동북아시아와 유럽의 핵에너지 갈등

1) 동북아시아에서의 핵에너지 갈등 양상

동북아시아 국가들 중 한국, 대만, 일본은 화석연료 부족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전기에너지 생산의 많은 부분을 핵에너지에 의존하고 있다(Rademacher, 1998.5.28). 한국과 일본은 총 전기생산량의 약 40%(각각 43,850MW, 9,970MW), 대만은 약 26%(4884MW)를 차지한다. 이들 국가와 비교해 화석연료가 풍부한 중국에서 핵에너지 점유율이 총 전기생산량의

약 0.8%(2167MW)에 불과하다. 이 통계가 말해주듯이 동북아시아에서 핵 에너지 갈등은 핵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낮은 중국에서는 거의 찾아볼 수 없고, 핵에너지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일본, 한국 그리고 대만에서 주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이들 세 국가는 상대적으로 좁은 국토와 에너지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연료공급의 안전성과 비축효과, 경제성 등을 이유로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택으로 핵에너지를 선택하고 있다. 그 결과 핵에너지의 부산물인 방사성 물질이 인간의 건강과 생태환경에 큰 부담을 주지만, 이들 국가는 핵에너지를 이용한 경제성장을 통해서만 분배의 문제(빈부갈등)를 해결할 수 있는 딜레마에 빠져 있다. 분배의 모순과 환경의 모순을 동시에 안고 가야 하는 사회적 구조 속에서 핵에너지 비중이 높은 이들 국가에서 핵에너지는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화석연료와 비교되면서 친환경적 에너지라고 홍보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북아시아에서 핵폐기물과 사용 후 연료가 재처리된 플루토늄을 둘러싼 갈등은 아직 그 끝이 보이지 않는다.

1970년대 후반기 이후 핵에너지를 도입하기 시작한 이들 국가에서 처음 나타난 갈등의 양상은 산업화를 일찍 경험한 구미 산업국가들의 사례처럼 핵발전소의 안전(원자로 폭발의 위협)과 관련된 문제였으나, 해가 거듭되면서 누적된 핵폐기물은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방사능오염(물, 공기, 토양)이 인간 건강과 생태계에 장기간(반감기 종료시점이 10,000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한다. 더군다나 핵에너지를 이용하는 국가들이 안고 있는 숙명적인 문제는 아직 핵폐기물을 수송·저장·보관할 수 있는 안전한 용기나 시설을 개발하지 못한 상태에서, 최선의 핵폐기물 처리는 임시저장이라는 잠정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반도에서 핵에너지 갈등은 80년대에는 새로 건설될 핵발전소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해당 주민들과 환경단체의 강한 저항을 받았으나, 최근에는 핵발전소에 임시로 저장된 중저준위 핵폐기물(작업복, 장갑, 덧신, 각종 폐부품 등)의 저장시설 부지를 찾는 과정에서 주된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갈등의 전개 양상은 안면도와 굴업도의 경우처럼 정부의 권위·비밀주의적 접근방식(예: 비밀스러운 입지선정, 지방유지와의 접근, 특정 지역의 경

제적 보상 등에 맞선 소위 ‘NIMBY(No, In My Back Yard!)’ 현상으로 대표되는 주민들의 저항과 환경단체들의 시위 주도로 특징지어진다(최연홍, 2000, 12). 입지선정 과정에서 해당 주민들과의 투명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지 않고 권력과 돈이라는 매체에 의해 기술화된 커뮤니케이션은 신 사회운동으로 불릴 수 있는 저항을 촉발시켰고, 정부의 의도는 항상 실패로 끝났다. 2000년 이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선정하는 데 2008년이면 원전 임시 저장고가 포화상태가 된다는 주장과 함께 해당 지역에 3000억 이상의 경제지원을 약속하면서 부지공모 형식이 도입되었다. 그러나 2003년 6월까지 정부의 당근 주기식 회유로 찬반이 엇갈린 주민들간의 갈등(정대하·박임근·박영률, 2003.6.2)으로 어떤 지방자체단체도 주민들의 이 공모에 응하지 않다가 공모마감 한 달 전에 전라북도 부안군수가 지방의회와 주민들의 반대를 묵살한 채 단독으로 신청해, 신청 후 한 달 만인 7월에 위도가 핵폐기장 부지로 결정되자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받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민주성, 투명성 그리고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라는 부지공모의 취지가 무시됨으로써 사업주체인 산자부와 한국수자원원자력(주)은 부안 군민들과 환경단체의 불신을 낳았다. 예를 들면 산자부와 한수원은 2008년이면 포화상태가 된다는 원전 임시저장고가 폐기물 압축기술(1/10-1/20) 덕택에 원전의 수명이 다 되어도 저장 용량을 초과할 수 없다는 사실과, 핵폐기물 저장소에 중저준위 핵폐기물뿐만 아니라 사용 후 핵연료인 고준위 핵폐기물도 함께 저장한다는 사실을 숨겼다(석광훈, 2003.7.5). 한수원과 정부당국은 위도 주민들에게 현금보상까지 약속하면서 그들의 동의를 받아냈지만, 나중에 그러한 직접보상은 어렵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는 위도 주민들과 부안 군민들의 강한 저항을 야기했다. 반년이 넘게 등교거부, 단식투쟁, 삼보일배 운동, 촛불시위 등 강한 주민 저항운동이 전개된 결과, 2003년 12월 10일 산업자원부 장관은 마침내 부안사태에 대해 공식 사과한 후 핵폐기장 건설을 백지화시켰고, “예비신청·찬반토론·주민투표”의 과정을 통한 유치신청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강양구, 2003.12.10).

부안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 1월 7일 원자핵공학과 강창순 교수

등 서울대 교수 63명이 “학교 지하에 방폐장 짓자”라는 총장을 대상으로 한 건의문을 발표해 국민의 시선을 끌었지만, 관악구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혀 핵폐기물 무해론에 정당성만 부여하는 학자들의 ‘쇼’로 끝났다(최현묵, 2004.1.7). 2004년 2월 14일 핵폐기장 찬반투표에 불안주민 3만7천여 명이 참여해 91.83%라는 절대적 반대로 불안사태는 국가가 아닌 주민들의 자발적인 신 사회운동에 의해 완결되었다(박순빈·빅임근, 2001.2.16). 불안사태는 “제2의 광주사태”라는 폭압 속에서 반년이 넘도록 진행된 불안 주민들의 생태공동체적 투쟁은 주민투표라는 합헌적 방식으로 민주주의의 승리를 이끌어냈다(황상익, 2004.2.19). 이로써 불안사태는 환경과 생명의 문화, 민주주의를 지켜나가는 지역정치 문화, 그리고 핵폐기장 백지화 투쟁을 전개하면서 싹튼 주민공동체의 문화를 창조하면서 한국인의 민주주의 수준에 맞는 참여정치를 여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편 핵발전소가 없는 북한에서는 핵무기와 관련해 미국과 주변국가들 간의 갈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영변의 실험 원자로에서 나오는 폐연료봉 처리로 플루토늄을 생산하고, 이를 이용해 핵무기를 제조한다는 미국과 북한의 주장에서 비롯된 소위 ‘북핵’ 갈등이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이는 남한에서 야기되고 있는 핵에너지 갈등과 완전히 다른 성격의 갈등으로서 다국적 해결을 필요로 하는 복잡한 양상을 띤다.

대만의 핵에너지 갈등은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인 관유도에서 주민들의 암 발생률이 현저히 높아지면서 주민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히면서 불붙었다. 이러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대만전력은 1997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북한에 핵폐기물을 수출하려는 시도를 하다가 한국을 비롯한 주변국 반핵단체들과 국제적인 반핵연대기구인 그린피스의 저항으로 수출계획을 백지화했다. 그 후 러시아로 수출하는 문제를 검토했지만,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과 관련된 갈등은 결국 2000년 핵에너지 포기를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당선된 대만 총통이 30%나 진행된 공정을 중단시키는 사태로 발전하게 된다. 그러나 건설중지가 발표된 지 3개월 만에 대만에 불어닥친 경제 불황과 다수당을 이루고 있는 야당 연합의 반대로 건설이 중단되었던 제4원

전 공사를 완성하는 것으로 이 갈등은 마무리된 것처럼 보였다(김경민, 2001, 3). 그러나 국제적 여론 악화와 란유도에서 계속된 반핵운동으로 대만 정부는 2003년 5월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원자력발전소의 전면 폐기를 담고 있는 “비핵국가추진법”을 제정해 의회에 송부했다(박중언, 2003.5.9). 이 법안에서 대만 정부는 앞으로 원전 신설을 불허하고 현존하는 3기의 원전도 단계적으로 폐기하기로 했다. 대만의 핵에너지 갈등은 처음에는 핵폐기물 임시 저장소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건강피해로 인해 시작되었지만, 북한에 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계획으로 한반도 주변국의 환경단체와 국제적 반핵단체들의 저항으로 발전했다. 그 결과 대만은 에너지 자원이 부족한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무기를 포함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핵에너지를 포기한 사례를 남겼다.

일본은 세계 제2차 대전 때 핵폭탄의 피해를 직접적으로 받은 국가임과 동시에 핵에너지 의존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 갈등이 다른 동북아시아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다. 특히 핵폐기물 저장 시설과 관련, 일본전기사업연합회는 경제적으로 낙후된 일본 본토의 복단에 위치한 아오모리현에 입지신청을 하고, 아오모리현과 로카쇼무라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사업설명과 홍보활동 및 여론수렴 과정을 거친 후 1985년 지방의회에 의해 로카쇼무라가 핵폐기물 저장소 부지로 결정되었다(김현, 2000.10). 이 핵폐기물 저장소는 1992년부터 중저준위 핵폐기물을 저장해 오고 있지만, 주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큰 저항 없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핵에너지 갈등은 핵폐기물 저장소 입지 선정보다는 핵폭탄 원료로 사용될 수 있는 플루토늄의 수입에서 더 심각한 갈등을 초래했다. 1996년 프랑스의 라아그(La Hague)에서 폐연료봉이 재처리되어 나오는 산물인 플루토늄이 일본으로 운송될 당시 국제적인 반핵연대인 그린피스는 프랑스에서 일본까지 이 수송선이 통과하는 40여 개국의 주변국가에 그 위험성을 알렸다. 곧, 일본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핵폭탄의 위험은 국가간의 핵(위협성)이동을 통해 새로운 갈등요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과거 일본군국주의를 경험한 주변국가들을 위협하는 공포의 대상이 되

고 있다.

동북아시아 3국의 핵에너지 갈등에서 확인된 사실은 집단적·공세적인 자기관계의 전개로서 신 사회운동이 일방적인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하려고 시도했던 각국 정부의 핵에너지 정책을 바꾸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이다. 이 때 커뮤니케이션의 기술화에 저항하면서 갈등의 전면에 나타난 신 사회운동의 주체가, 곧 핵폐기물 갈등을 이끌어 가는 해당 주민들과 반핵단체들이, 선택한 자기관계의 전개전략은 공포 커뮤니케이션(인간생명과 건강위협, 생태계 파괴)과 삶의 기회의 집단화로서 핵에너지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는 모험을 회피하려는 집단행위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핵폐기물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적인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수행했다. 곧, 모험커뮤니케이션은 때로는 (한국과 일본의 경우) 부분적인 갈등 해소를 할 수 있었고(예: 한국의 경우 안면도, 굴업도, 위도 핵폐기장 백지화, 정부의 일방적인 핵폐기장 선정에서 부지 공모제도로의 전환, “예비신청·찬반토론·주민투표”라는 민주적인 과정을 통한 핵폐기장 유치신청 등, 일본의 경우 플루토늄 수입의 중단 등), 때로는 (대만의 경우) 전면적으로 핵에너지 갈등을 풀 수 있었다(예: 핵폐기물 북한 수출계획 포기, 무핵국가 선언 등).

2) 유럽에서의 핵에너지 갈등 양상

유럽국가들 중 핵에너지를 가장 많이 생산하고 있는 국가는 프랑스(62,853MW; 59기; 총 전기생산량의 78%)이고, 그 다음으로 독일(22,282MW; 20기; 32%), 러시아(19,843MW; 29기; 14%), 우크라이나(13,756MW; 16기; 47%), 영국(12,968MW; 35기; 28%), 스웨덴(10,040MW; 12기; 46%), 스페인(7,320; 9기; 30%), 벨기에(5,712MW; 7기; 60%), 불가리아(3,538MW; 6기; 45%), 스위스(3,079MW; 5기; 41%), 핀란드(2,455MW; 4기; 30%) 순이다(Rademacher, 1998.5.28). 이들 국가의 핵에너지 갈등은 원자력의 선진국인 만큼 체르노빌 사건까지만 해도 원전의

안전성을 둘러싸고 전개되었다. 그러나 원전 가동의 세월만큼 축적되어 가는 핵폐기물은 새로운 갈등 대상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대부분의 유럽연합 국가들은 1986년 체르노빌 사고 이후 핵 발전을 지지하지 않고 있으며, 신규로 건설되고 있는 원자로도 없다(반핵국민행동, 2001). 오스트리아, 덴마크,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룩셈부르크, 포르투갈에는 아예 핵발전소가 존재하지 않는다. 벨기에, 독일, 네덜란드, 스페인, 스웨덴에서는 기존의 핵발전소 수명을 제한하기로 정치적인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다. 독일의 경우, 단순히 핵발전소를 건설할 지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다 빨리 기존 원자로를 중단시킬 수 있을지는 검토하고 있다. 독일 통일 전 서독정부는 이미 서독의 모든 핵발전소를 중단시킨 반면, 사회민주주의 녹색당 정부는 현재 남아 있는 19기의 원자로를 전면 폐기시킬 계획하고 있다. 핵발전으로 78% 이상의 전력을 얻고 있는 프랑스조차, 핵발전소 건설에 대한 모라토리움을 선언했다.

유럽에서 지방분권이 잘 보장된 국가들(예: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 정치체계의 개방성으로 인해 반핵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중앙집중식 국가들(예: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에서는 폐쇄된 정치체제로 인해 반핵운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났다(Kriesi & Giugni, 1996, pp. 335-337). 또한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핵폐기물, 특히 사용 후 연료 재처리와 관련해서 반핵운동의 강도는 핵무기 보유국가들(예: 영국, 프랑스)와 비보유국가들 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먼저(1959년) 중저준위 핵폐기물 저장소를 드릭(Drigg)에 설치해 운영해 오고 있는 영국은 핵폐기물의 위험성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이 결여된 상태에서 처음에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영국은 1991년 컴브리아주의 한 마을을 중저준위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였지만, 전국민적 반발과 부지의 안전성 문제를 우려한 환경부의 불허로 1997년 이 계획이 백지화되는 갈등을 겪었다(석광훈, 2003.7.5). 이러한 갈등 양상과는 달리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연료가

셀라필드(Sellafield)⁵⁾에 위치한 의 재처리시설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위험에 대해서는 큰 저항이 없다. 이는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는 영국이 꼭 필요로 하는 플루토늄 생산에 대해 영국인들이 무언의 동의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프랑스의 경우 역시 1995년 네 곳을 고준위 핵폐기장 부지로 선정했으나, 그 과정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자살과 지역여론의 거센 저항으로 2000년 이 선정 계획을 백지화시켰다. 중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도 영구 처분장이 아니라 30년 기한의 임시 보관시설을 라망슈(La Manche)라는 지역에 운영한 바 있으나, 현재는 로브(L'Aube) 지역으로 이동시켜 임시 보관하고 있다(석광훈, 2003.7.5). 프랑스 역시 영국과 마찬가지로 고준위 핵폐기물이 전국의 핵발전소로부터 라아그(La Hague)로 수송되어 재처리되고 있지만, 핵무기 보유 국가인 만큼 수송 과정에서는 큰 저항이 일어나지 않았다.

독일은 1950년대 이미 핵발전소를 보유한 국가로서 가동 후 약 10년이 넘은 1974년 처음으로 핵폐기물 처리의 모든 과정(사용 후 연료 재처리를 통한 플루토늄 생산에서부터 최종 저장까지)을 한 장소에서 일어나는 핵폐기물 처리센터(Nukleare Entsorgungszentrum: NEZ)에 대한 구상을 발표했다. 1977년 니더작센(Niedersachsen) 주지사는 동독과의 국경지대인 류호우-다넨베르크(Rüchow-Dannenberg) 소재 고어레빈(Gorleben)에 핵폐기물 처리센터를 설치하겠다는 안을 내놓았다. 고어레벤은 방사능을 차단하기에 유리한 암염 지층이 발달된 곳이고, 주민의 저항을 조직할 만한 인구가 살지

5) 서유럽에서 사용 후 연료가 재처리되는 곳은 영국의 셀라필드(Sellafield)와 프랑스의 라아그(La Hague) 두 곳뿐이다. 셀라필드에서는 영국의 모든 원전에서 발생하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 후 연료가 재처리되고, 라아그에서는 프랑스, 독일 그리고 스위스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연료가 이곳으로 수송되어 재처리되고 있다. 재처리된 후 나오는 물질은 원자폭탄의 원료로 사용되는 플루토늄이다. 러시아는 첼랴빈스크(Tschelyabinsk)에서 플루토늄을 생산한다. 동북아시아의 경우 이러한 재처리 시설을 갖춘 국가가 없고, 원전에서 배출되는 사용 후 연료는 현재 원전 내의 수조 속에 임시 보관되고 있다.

않은 한적한 마을이며, 높은 실업률과 빈약한 사회간접자본 및 약한 경제력을 되살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입지 선정에 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된 곳이었다. 그러나 전국에서 모여든 국민의 강한 저항에 부딪혀 연방정부는 1979년 폐연료봉 재처리를 포기했다. 이 곳은 현재 핵폐기물이 임시로 저장되고 있지만, 현재 반핵운동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 고어레벤의 실패에 이어 1982년 '독일 사용 후 연료 재처리 회사'(DWK)가 바이에른(Bayern)주 오버팔쯔(Oberpfalz) 소재 박커스도르프(Wackersdorf)를 재처리 시설 입지로 신청했으나, 오버팔쯔 주민들의 거센 저항으로 1982년 지반 시추를 거친 후 바이에른 정부로부터 부분적인 시설 건설 허가만 얻어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 역시 주민들의 항의로 설명회도 제대로 개최하지 못한 채 무산되었다. 1985년 9월 연방정부가 바이에른주 정부의 도움으로 박커스도르프를 폐연료봉 재처리 시설 부지로 결정했을 때 전국에서 몰려든 수만 명의 반대시위자들⁶⁾이 오두막집촌과 텐트촌을 설치하고 상주하면서 저항운동을 벌인 결과, 1989년 DWK는 7년 동안의 노력을 허사로 한 채 재처리장 건설을 완전히 중단했다. 통일된 독일에서 핵폐기물과 관련된 갈등은 1998년 폐연료봉 수송을 둘러싸고 다시 한번 크게 불붙는다(Uhlmannsiek, 1998.6.7). 이 해 4월부터 6월까지 전국의 핵발전소 인근에 임시로 저장된 핵연료봉이 재처리되기 위해 프랑스 라아그로 수송되는 과정에서 수송 용기 '카스토어(CASTOR: Cask for storage and transport of radioactive material)'가 방사능 허용치인 4 Bq/cm²(평방센티 당 배크렐)를 초과해 10-20Bq/cm²로 측정되었다는 혐의를 받아 시위자들은 수송열차의 통과 예정지에서 철로에 사슬로 몸을 묶어 수송열차 통과를 저지했다. 시위자들은 핵에너지 포기와 함께 핵폐기물은 핵발전소 내에 저장되어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핵폐기물 이동을 저지했다. 2003년 현재 독일의

6) 부지 결정이 내려진 1985년 9월 이후 3개월 동안 15,000명 이상, 1986년 4월 28일 체르노빌 사건이 터진 이후 한 해 동안 '시민전쟁'을 방불케 하는 100,000명 이상이 운집했고, 이 해 오순절 휴가기간(1주일) 동안에는 50,000명 이상이 모여 평화적인 반대시위를 벌였다(Widerstand gegen die WAA Wackersdorf, 1998).

그린피스 지부들은 독일 각 주를 통과하는 핵폐기물의 수송차단 신청을 각 주 정부에 신청해놓고 있다(Thiel, 2003.1). 독일은 핵무기 보유국이 아닌 만큼 플루토늄을 생산하는 폐연료봉 처리에 대해 전국민이 반대하고 있으며, 핵폐기물 최종 저장지 부지 선정에서부터 그 수송에 이르기까지 전국민적 저항으로 인해 60년 동안의 핵발전 역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폐기물 처리와 관련된 모든 분야에서 아직 그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못했다.

핵에너지를 둘러싸고 유럽에서 전개된 신 사회운동은 동북아시아보다 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만큼 더 많은 핵에너지 갈등을 해결하는 데 이바지했다. 핵발전소 유럽의 모험 커뮤니케이션 전략 역시 인간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한 공포커뮤니케이션과 삶의 기회를 집단화하기 위해 핵에너지의 불확실성이 낳는 모험을 회피하려는 집단행위의 합리성 추구라고 할 수 있다. 그 결과 핵에너지 의존율이 가장 높은 프랑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핵에너지 자체를 포기하도록 만드는 데 신 사회운동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핵폐기장 선정 문제와 관련해서도 신 사회운동으로서 모험 커뮤니케이션은 러시아를 제외한 모든 유럽국가에서 어김없이 작동하고 있다. 다만, 영국과 프랑스처럼 핵무기 보유국은 폐연료봉 재처리를 통해서만 핵무기 연료인 플루토늄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이들 국가에서 폐연료봉 재처리 문제는 아직도 신 사회운동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그러나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독일의 경우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 문제를 놓고 전개된 모험 커뮤니케이션에서 신 사회운동을 주도한 반핵단체와 독일국민의 승리로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 더 나아가 독일에서는 핵폐기물(국내·국외) 수송의 위험성이 알려진 후 그린피스 독일지부는 최근까지 핵폐기물 수송을 끊임없이 감시·저지함으로써, 이 문제는 아직도 치열한 모험 커뮤니케이션의 주제가 되어 있다.

4. 신 사회운동과 핵에너지 갈등의 해소

신 사회운동의 분산된 행동이 특정 사회의 지체와 마비 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는 비난은 핵에너지 갈등에서도 유효하다. 국가이기주의 혹은 지역이기주의가 세계발전 혹은 국가발전의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이 그것이다. 따라서 핵에너지 갈등을 연구하는 데 방법론적인 어려움은 이러한 신 사회운동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할 수 있는가 하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설정이 어떻게 핵에너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문제로 귀결될 수 있다. 핵에너지는 갈등은 체르노빌 사건과 프랑스에서 생산된 플루토늄의 국가간 이동, 대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 계획, 러시아 핵폐기물의 동해 투기, 그리고 최근 등장한 북핵 문제 등이 보여주듯이, 이제 단일 민족국가적 문제가 아니라 전지구적 갈등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지구적 패러다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전환기(Wendezeit)’의 저자 카프라(Capra, 1991)는 전지구적으로 얽혀 있는 상호 의존적 생태학을 주장한다. 그래서 그는 지구의 생태학이 모든 생명체의 내적인 가치를 존중하고 인간을 생명이 있는 자연의 풍요로운 직물의 특별한 섬유에 불과하다고 보는 전체적인 세계상을 요구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정치가와 전문가들은 우리의 문제가 생태학적인 네트워크에 놓여 있다는 사실에 눈이 멀 뿐만 아니라 그들의 문제해결 제안이 미래 세대의 쾌적함과 복지를 어떻게 손상시키고 있는지를 걱정하지도 않는다. 그러나 생태학적 관점에서 보면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문제해결만이 수궁될 수 있다. 장기적인 ‘지속가능성(subtainability)’이라는 개념은 오늘날 생태환경운동의 핵심 개념이 되었다. 구체적으로는 농업, 임업, 산업, 기후(공기), 물, 핵폐기물을 포함한 쓰레기 처리계획 등이 인류의 미래와 관련된 지속가능성의 핵심요소다(Knaus & Renn, 1998).

전환기의 모토는 “변천의 책”으로 불리는 중국의 고전 역경(易經: I Ging, 1990)에서 유래한다. “파멸의 시대가 지나면 전환기가 온다. 오래 전 추방되

어버린 강한 빛이 다시 나타난다. 여기에는 운동이 있다. 그러나 이 운동은 강요된 것이 아니다 (...). 그것은 스스로 발생한 자연스러운 운동이다. 따라서 옛것을 변형시키는 것은 아주 쉽다. 옛것은 폐기되고 새것이 도입된다. 양자는 시대에 맞기 때문에 어떤 피해도 가져다주지 않는다.” (Capra, 1991, p. VII에서 재인용) 사물을 전지구적이고 진화론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역경의 교훈이다.

이러한 세계상은 노자의 도덕경(道德經: 도의미의 책)에도 들어 있다. “(...) 도(의미)의 영원성은 모든 운동이 자신 속으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에서 유래한다. 모든 대립은 이 도를 통해 서로 상쇄됨으로써 제거된다. 곧, 모든 운동은 필연적으로 그 반대로 전도된다. (...) 삶은 항상 전체 내에서만 존재하고, 결코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 따라서 자연은 인간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지 않고, 모든 존재가 자연의 풍요에 묶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이 풍요로부터 자기자신만을 위해 어떤 것을 고집할 때, 그 존재는 그럼으로써 죽음에 빠질 것이다(Laotse, 1988, p. 33).

전환기의 패러다임과 관련, 근대 유럽에서도 헤겔(Hegel)의 변증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총체적인 사고를 다시 회복하는 바람이 불었다. 예를 들면 엥겔스(Engels, 1983, pp. 354-369)가 “자연의 변증법”을 “총체적 상관관계의 과학”으로 구상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실을 경고한다. 자연에서는 그 어떤 것도 개별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모든 것은 다른 것에 작용하고 그 반대도 진리다. 그리고 자연과학자들이 가장 간단한 사물에서 명료하게 보는 데 방해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러한 전방향적(全方向的)인 운동과 상호작용을 대부분의 경우 잊어버린다는 사실이다.

20세기 후반기에 들어와 ‘로마클럽’⁷⁾은 서구문명이 인구, 오염, 물질 그

7) 로마클럽은 이탈리아 피아트와 올리베티 제조회사의 간부인 페체이(Aurelio Peccei) 회장이 1968년 조바니 아그넬리 재단(The Giovanni Agnelli Foundation: 아그넬리는 피아트 회장)의 지원을 받아 30명의 회원으로 출발하여 2년 후 약 75명의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컨설턴트들을 회원으로 활동하는 클럽이다(Humphrey & Buttle, 1982/1995, p. 150).

리고 에너지의 한계에 도달할 것이라는 예측을 내놓음으로써 전세계적으로 생태학적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972년 발표된 “성장의 한계”라는 로마클럽 보고서(A Report on the Club of Rome's on the Predicament of Mankind: 인류의 위기에 대한 로마클럽 보고서)는 서구문명이 안고 있는 위 문제점들은 한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초월하기 때문에 전지구적 범위에서 연구하고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다(Humphrey & Buttle, 1982/1995, pp. 149-174). 이 보고서는 지구의 성장을 결정하고, 제한하는 다섯 가지 기본 요인들(인구, 농업생산, 천연자원, 공업생산 그리고 오염)간의 상호작용을 체계동학(system dynamics)이란 복잡한 수학방정식들로 풀 수 있다는 제언했다. 그러나 이 보고서는 사회적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사회과학자들이 제외된 자연과학적 연구결과로 이루어진 결과 사회운동가들의 일반적인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처음의 관심에 비해 논쟁이 쇠퇴했고, 다섯 가지 요인들을 모두 해결하는 데 인식과 실천의 한계가 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문제와 관련된 논쟁은 핵에너지와 같은 특정 주제를 놓고 전지구적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Luhmann, 1979).

체르노빌 사건, 유럽 핵폐기물 국가간 이동 등에서 확인되었듯이 핵에너지 생산의 부작용인 방사능 물질의 위험이 세계화(전지구화)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이 위험은 한 국가에서 해결할 수 없는 다국적 문제가 되었다. 이와 관련, 80년대 후반 ‘모험사회(Risikogesellschaft)’의 개념을 창안했던 벡(Beck, 1996)은 ‘세계모험사회(Weltrisikogesellschaft)’와 ‘하위정치(Subpolitik)’라는 개념들을 통해 신 사회운동의 방향설정에 중요한 이정표를 제공한다. 그는 ‘자연’이나 ‘생태학’의 개념은 우리의 인지와 독립해 그 자체로서 이 세상에 존재할 수 없다는 가정을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는다. 그러한 개념들은 사회형성 과정에서 문화와 전통에 기초한 자연의 상징적인 중개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프랑스인과 독일인이 인지하는 핵발전소의 위험성은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벡은 자연과 사회의 이원성(二元性) 대신 모험, 위험, 부작용, 보장가능성, 개인화와 세계화 등 “생산된 불확실성(fabrizierte Unsicherheit)”을 핵심적인 주제로 다룰 것을 제안한다. 사회와 자연의 이원

론을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행위와 관련된 사회운동이론 및 제도이론”에 기초한 계급, 민족국가, 체제의 경계를 초월하는 “담론의 동맹”이 요구된다. 이 동맹은 인지지도(cognitive map), 역사 라인(history line)과 금기들(taboos)을 창조하고 발전시키며 변화시킨다. 곧, 담론을 통해 현실이 창조되고 바뀐다. 이러한 가정 아래 구상된 ‘세계모험사회’는 첫째, 세계모험사회는 스스로 주제와 문제가 된다. 전지구적 위협은 전지구적 공통점을 유발해(잠재적인) 세계공론권(Weltöffentlichkeit)의 윤곽을 형성한다. 둘째, 세계모험사회는 문명사회에서 인지된 자기위협은 협동하는 국제적인 제도들의 형성과 발전을 위해 정치적으로 조직될 수 있는 동인을 낳는다. 셋째, 세계모험사회는 정치적인 것의 한계를 없앤다. 단일 민족국가적 정치의 좌표와 연합을 상대화하고 무력화시키는 전지구적·직접적인 하위정치가 탄생하고, 이는 전세계적으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배제하는 설득의 동맹”을 낳을 수 있다.

백의 논의에서 ‘하위정치’의 개념은 직접적인 정치라고 정의될 수 있다. 곧, 대의제도의 의지형성(정당, 의회)을 비껴가면서 개인들이, 흔히 법적인 보장 없이, 개별적인 정치적 결정들에 참여하는 정치이다. 세계모험사회 논의에서 ‘하위정치’는 “위로부터의 세계화”(예: 제도권 정치무대에서 이루어지는 국제적인 조약과 UN과 같은 제도들)와 상반된 개념으로서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예: 정치·의회 체계의 저편에서 기성의 정치 및 이익추구 체계들을 문제삼는 새로운 사회운동가들)라고 파악될 수 있다.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에 참여하는 막강한 운동가들의 조직으로서 로빈우드(Robin Wood), 그린피스(Greenpeace), 국제 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세계야생생물기금(World Wildlife Fund: WWF)과 같은 NGOs(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등이 존재한다. UN의 통계에 따르면 1996년 당시 이러한 그룹들의 숫자는 전세계적으로 50,000개가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위정치는 핵에너지와 포화한 생태학적 위협을 장기적으로 무시할 수 없는 “체계적인 인간기본권 침해”로 간주한다. 왜냐하면 위협들은 산업적으로 생산되고, 경제적으로는 외부로 표출되며, 법률적으로 개인화되며, 자연과학적

으로 정당화되고, 정치적으로는 무해화되기 때문이다. 이로써 제도들의 권력과 신뢰성이 붕괴되면 이 체계를 검증하고 비판하는 하위정치가 나타난다. 세계사회적 하위정치는 “개개의, 특정주제와 관련된 대립의 동맹”이라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핵에너지 갈등과 관련해, 그린피스⁸⁾는 의도적으로 세계사회를 하위정치화하고 있다.

실제로 세계모험사회에서 핵에너지 갈등해소를 위한 신 사회운동은 일본의 동맹을 결성해 “아래로부터의 세계화”인 하위정치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핵에너지 갈등을 겪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에서 각국지부와 연대해 이 갈등을 해결하는 데 깊이 개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위에서 언급했듯이 다만 핵폐기물의 북한 수출계획을 각국 지부회원들과 연합해 저지했고, 일본이 핵무장을 위해 프랑스로부터 플루토늄 수입했을 때 이를 막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쟁한 결과, 일본은 플루토늄 수입을 중단했다. 유럽에서도 그린피스는 핵에너지 산업은 안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불건강하며 따라서 불필요하다는 모토 아래 핵발전소 건설 금지운동,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금지운동, 핵발전소 내에 핵폐기물 저장 의무화 운동, 플루토늄의 무역

8) 그린피스는 1971년 캐나다 밴쿠버 항구에서 12명의 환경보호운동가들이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해 결성한 국제적인 환경보호단체다. 이 단체의 원래의 명칭은 핵실험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과문을 만들지 마시오”였으나, 미국이 알래스카주 암차카섬에서 핵실험 반대시위를 벌이기 위해 출항한 보트의 중앙에 그린피스(Greenpeace)라고 쓴 녹색깃발을 건 것이 계기가 되어 단체 이름이 되었다. 1995년 프랑스가 남태평양의 한 섬에서 핵실험을 시도할 때 레인보 워리어호가 섬 주변에 숨어서 이를 감시하다가 프랑스 특공대에게 쫓기는 추격 상황이 그린피스 카메라맨들의 비디오 카메라에 녹화되어 인터넷을 통해 전세계에 공개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포경금지협약을 위반한 노르웨이의 재포획 불매운동을 벌여 세계 수천 명이 이들의 캠페인에 동참하였고, 인체에 해로운 배기가스를 내뿜지 않는 자동차를 만들어 전세계에 홍보하였으며, 유엔총회에서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CTBT)이 통과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이 단체는 주로 기후, 유독성 물질, 핵, 해양, 유전공학, 해양투기, 산림 등의 분야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2002년 현재 전세계 39개국에 43개 지부가 있으며, 160여 개국 300만 명의 회원이 내는 기부금으로 활동하고 있다. 본부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다(네이버백과사전, 2002.11.4).

금지운동, “핵에너지에서 해방된 유럽”을 위한 EU헌법 제정운동 등을 통해 핵에너지 없는 유럽을 만들어가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Greenpeace, 2003.5.29). 또 다른 사례로는, 1997년 그린피스는 터키 에너지부가 캐나다, 일본, 독일, 미국 등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수입하려는 계획을 현지 그린피스 회원들과 연합해 저지한 결과 솔라 에너지를 선택하도록 하는 데 성공했다 (GREENPEACE, 1997.6.30; GP, 1998.8.28). 이처럼 오늘날 전지구적 담론 동맹으로서 그린피스의 이러한 전지구적 핵 추방 및 억제 운동은 세계공론 권에서 큰 반향을 얻으면서 핵에너지 갈등을 해소하고 있다.

5. 결론

오늘날 핵에너지 갈등은 한 국가의 차원을 넘어 전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핵에너지 갈등은 이 에너지를 생산하고 원전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나오는 방사능 물질의 독성이 장기간 전지구적으로 인간의 건강과 생태계를 현저히 파괴할 수 있다는 데서 비롯된다. 이 갈등은 인류가 아직도 완전히 해결하지 못한 분배문제(빈부갈등)를 대처하면서 나온 20세기 후반의 새로운 갈등으로서 정치체계, 경제체계, 과학체계가 이를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더 나아가 핵에너지 갈등은 원전에서 배출된 폐연료봉을 재처리해 생산된 플루토늄이 핵무기의 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평화를 위협할 수 있는 잠재력 때문에 전지구적 문제로 발전한다.

핵에너지 갈등을 전개시키는 일차적인 주체는, 한편으로는 핵에너지 생산의 비용과 효율성에 근거해 이 에너지를 결정하는 정치체계(정책 자문에 참여하는 과학체계 포함)와 경제체계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인간생명과 생태계의 가치를 중시하는 원전 및 핵폐기장 인근에 거주하는 해당 주민들 및 반핵 환경단체들이다. 그러나 핵폐기물이나 그 부산물인 플루토늄이 한 국가에서 다른 국가로 이동될 때 그린피스와 다국적 반핵연대가 국제적인

갈등 주체로서 저항행위에 들어간다. 이는 국가적 모험사회 내에서 일어나는 모험 커뮤니케이션이 세계모험사회의 국제적 모험 커뮤니케이션으로 확대되는 대목이다. 우리는 이러한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신 사회운동이라고 부를 수 있다.

신 사회운동은 돈과 권력으로 대표되는 상징적으로 일반화된 커뮤니케이션 매체를 통해 정치체제와 경제체제가 사회적 맥락(인간의 건강, 생태계의 지속가능성 등)을 무시하고 추상적·이질적·무차별적인 관계들을 점증시킬 때, 곧 커뮤니케이션을 기술화 할 때, 이에 대항한 피해 당사자의 의식체제가 자기관계(“나는 나다”)를 공세적·집단적으로 전개시키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 전략으로는 방사능을 “죽음의 빛” 등으로 묘사하는 것처럼 이성적 논증이 불필요한 공포의 커뮤니케이션과, 상실된 사회적 맥락을 부활시키려는 삶의 기회의 집단화(예: 공동선으로 평화, 건강, 환경 등)가 있다. 그러나 이렇게 ‘모험’(자기 결정으로 인한 피해)과 ‘위험’(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타자의 결정에 의한 피해)에 의해 갈라진 이중 사회에서는 신 사회운동이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지체와 마비”를 야기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신 사회운동으로서 핵에너지 갈등의 전개 양상은 동북아시아와 유럽을 비교했을 때 핵폐기장 입지선정과 관련된, 곧 “부에 의해 조건지어진”⁹⁾ 위험을 놓고 벌어지는 갈등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다만 유럽에서는 현재 프랑스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나라가 새로운 핵발전소 건설을 계획하지 않을 뿐더러, 현존하는 원전을 단계적으로 철거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핵폐기장 부지선정 문제로 주된 갈등이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9) 벡(Beck, 1996, pp. 133-136)은 전지구적 위험들을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다. 첫째, 선악에 의해 생산된 갈등으로서 “부(富)에 의해 조건지어진” 생태계 파괴와 기술적·산업적 위험(예: 오존층 파괴, 온실효과, 방사능 오염, 유전자조작에 의해 예상된 부작용), 둘째, “가난에 의해 조건지어진” 생태계 파괴와 기술적·산업적 위험으로서 부자를 위해 가난한 자들이 자신들을 스스로 파괴하는 현상(예: 열대 우림 지역의 원시림 벌목, 빈곤 국가로 수출된 핵폐기물), 그리고 셋째, 전쟁 시 사용되는 “대량학살무기”의 위험(핵무기, 생화학무기 등)이 있다.

동북아시아에서는 대만에서 북한으로 핵폐기물을 수출하려는 계획에서 드러난 것처럼 “빈곤에 의해 조건지어진” 생태계 파괴의 위험이 발생하는 사례가 나타났다. 또한 일본이 프랑스의 사용 후 연료 재처리장인 라아그로부터 플루토늄을 수입했을 때와, ‘북핵’ 문제를 놓고 한반도 주변국가와 미국 간에 벌어진 갈등에서 “대량학살무기”의 위험을 보여주었다. 특이한 것은 유럽국가들 중 핵무기를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동북아시아에서와는 달리 핵무기를 둘러싼 국내외적 저항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핵무기가 없는 독일에서는 고준위 핵폐기물인 폐연료봉 재처리장 건설 문제로 엄청난 갈등을 겪었으며, 모든 핵폐기물의 국가간 이동을 저지하는 데 신 사회운동의 총력이 집중되었다.

한편 유럽과 동북아시아에서 핵에너지 갈등의 전개양상은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가미된 정치체계의 개방성 여부에 따라 달리 전개되었다. 유럽의 경우 독일처럼 지방분권이 잘 보장된 국가에서는 정치체계의 개방성으로 인해 반핵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지만, 중앙집중식 국가들(영국, 프랑스)에서는 폐쇄된 정치체제로 인해 반핵운동이 상대적으로 적게 일어났다. 동북아시아(대만, 한국, 북한, 일본)의 경우 핵에너지를 둘러싼 신 사회운동은 산업화와 민주화의 정도가 앞선 국가에서 먼저 나타났고, 그 해소 방식에서도 정치체계의 개방성에 따라 선·후진 국가의 차이가 나타났다.

모험 커뮤니케이션으로서 신 사회운동이 국가와 세계 발전의 지체와 마비라는 비난을 받지 않고 핵에너지 갈등 해소에 공헌하려면 동북아시아와 유럽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전지구적 패러다임이 요청된다. 실제로 이러한 패러다임은 인류가 생태학적 위기를 맞아 파멸을 막기 위한 ‘전환기’의 패러다임으로 작용하고 있다. 우선 생태학적 지속가능성을 지향하고 있는 전환기의 신 사회운동은 자연발생적 지구책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그리고 신 사회운동은 로마클럽이 제안한 ‘성장의 한계’처럼 핵에너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을 넘어 전지구적 범위로 일어나고 있다. 마지막으 핵에너지 갈등해소를 위해 ‘세계모험사회’에서 전개되고 있는 신 사회운동은 계급, 민족국가, 체계의 경계를 초월한 “담론의 동맹”을 통해 ‘하

위정치'의 역할을 떠맡고 있다. 오늘날 담론의 동맹으로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반핵환경단체인 그린피스는 '하위정치'를 통해 실제로 핵에너지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소하고 있다.

그러나 하위정치 형식으로서 신 사회운동이 모든 핵에너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신 사회운동의 핵심적인 담론은 모험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핵에너지의 모험이 주체화되지 않으면, 이 모험의 피해와 관련된 모험 생산자와 피해 당사자들의 반항을 불러일으킬 수 없다는 것이다. 이미 누적되어 있는 핵폐기물 처리는 새로운 기술을 통해 해결될 수밖에 없는 기술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신 사회운동은 핵에너지를 대체할 미래의 에너지원을 개발하고, 미완성의 핵폐기물처리 기술을 완성해 나가도록 유도하는 촉매로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핵에너지를 둘러싼 신 사회운동, 곧 모험 커뮤니케이션은 지구상에 핵에너지가 존재하는 한 전지구적으로 계속될 것이다.

이 논문은 핵에너지를 둘러싸고 불붙을 수 있는 갈등들(우라늄 농축, 연료봉 제작공장, 원자력 발전소, 핵폐기물 중간 저장, 핵폐기물 운송, 폐연료봉 재처리 그리고 핵폐기물 최종 저장) 중에서 최근 10여 년 동안 국내외에서 큰 관심을 끌고 있는 핵폐기물과 관련된 갈등만을 다루었다. 앞으로 인간 유전체 조작에 의한 부작용 등 미래에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는 위험도 과학 커뮤니케이션(모험 커뮤니케이션) 영역에서 다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 등장하는 '세계모험사회'와 '하위정치'와 같은 개념들이 다소 생경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얼마 전에 전개되었던 '동강댐' 건설을 둘러싼 갈등은 그린피스와 같은 국제적인 환경단체들과 연대한 저항운동을 통해 해결되었다. 특히 핵폐기장 건설을 둘러싸고 전북 부안에서 전개되었던 8개월 동안의 극한 갈등은 2004년 2월 14일 하위정치인 지역주민들의 주민투표를 통해 해결된 경우다.

◆ 참고문헌

- 강양구 (2003.12.10). 부안 핵폐기장 사실상 '백지화'. 『프레시안』.
- 김경민 (2001.3). 대만 원전정책 바라보기. 『이달의 원자력발전』. 7-9.
- 김성재 (1996). 환경문제와 모험 커뮤니케이션. 『한국언론학보』, 제37호, 92-132.
- _____ (1998). 『체계이론과 커뮤니케이션: 루만의 커뮤니케이션 이론』.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김 현 (2000). 외국의 방사성폐기물 운영실태. 『이달의 원자력발전』. 7-9.
- 네이버백과사전(2003.11.4) <http://100.naver.com/100.php?id=238339&cid=AD1057742420807&adflag=1>
- 박순빈·박임근 (2004.2.16). 부안 주민투표 반대 91.83%. 『한겨레』. 1.
- 박중언 (2003.5.19). 대만 “원전 전면폐기”. 『한겨레』. 10.
- 석광훈 (2003.7.5). 원전론자들의 흑세무민. 『한겨레』. 12.
- 이정춘 (1996). 현대사회의 ‘위험’과 ‘위험보도의 쟁점’에 대한 고찰. 『한국언론학보』, 제37호, 62-91.
- 정대하·박임근·박영률 (2003.6.3). 핵폐기장 앞서 지역사회 ‘해분열’. 『한겨레』. 13.
- 최연홍 (2000.12). 원자력시설 부지선정과정의 갈등과 해소방안. 『이달의 원자력발전』. 7-9.
- 반핵국민행동 (2001). <http://antinuke.kfem.or.kr/depth4.htm>
- 최현목 (2004.1.7). 서울대 교수 60명 “학교 지하에 방폐장 짓자” 서명. 『조선일보』.
- <http://www.chosun.com/w21data/html/news/200401/200401070147.html>
- 페터스·송해룡 (2001). 『위험 커뮤니케이션』.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황상익 (2004.2.19). 부안의 ‘희망’에서 배우라. 『한겨레』. 27.
- Beck, U. (1986). *Risikogesellschaft: Auf dem Weg in eine andere Moderne*.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1988). *Gegengifte: Die organisierte Unverantwortlichkeit*.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ed.)(1991). *Politik in der Risikogesellschaft*. Frankfurt a. M.:

- Suhrkamp.
- _____ (1996). Weltrisikogesellschaft, Weltöffentlichkeit und globale Subpolitik: Ökologische Fragen im Bezugsrahmen fabrizierter Subpolitik. In A. Diekmann & C. Jaeger(eds.). *Umweltsoziologie* (pp. 119-147).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Bonß, W. (1995). *Vom Risiko: Unsicherheit und Ungewißheit in der Moderne*. Hamburg: Hamburger Edition HIS.
- Braun, N. & Axel, F (1995). Umweltverhalten und Rationalität. *Köl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Jg. 47, Heft 2, 231-248.
- Capra, F. (1991). *Wendezeit. Bausteine für ein neues Weltbild*. München: dtv.
- Engels, F. (1983). Dialektik der Natur. in: *Marx Engels Werke, Bd. 20*. Berlin: Dietz Verlag, 307-568.
- Geschichte der WAA (1998): <http://www.asamnet.de/oeffentl/bi/geschich.htm>
- GP (1998.8.28) Mock Announcement: Turkey Drops Nuclear Plans and Goes Solar <http://archive.greenpeace.org/majordomo/index-press-releases/1998/msg00256.html>
- GREENPEACE (1997.6.30) BLOCKS ENTRANCE OF TURKISH ENERGY MINISTRY: Protest against plans by foreign companies to build nuclear reactors <http://archive.greenpeace.org/pressreleases/nucreact/1997jun30.html>
- Greenpeace (2003.5.29). Für Ein Atomstromfreies-Europa! <http://www.greenpeace.org/deutschland/>
- Habermas, J. (1987). *Theorie des kommunikativen Handelns*. Bd. 2. Frankfurt a. M.: Suhrkamp.
- Rademacher, H. (1998.5.28). Straßenschlachten wegen Atommülltransporten gibt es in Amerika nicht. *Frankfurter Allgemeiner Zeitung*, 4.
- Humphrey, C. R. & Buttle, F. R. (1982). *Environment, Energy and Society Belmont*. California: Wadworth Publishing. 양총희·이시재 옮김 (1995), *환경사회학*. 서울: 사회비평사.
- I Ging (1990). *Übersetzt von Richard Wilhelm*. München: Diederichs.
- Japp, K. P. (1993). Risiken der Technisierung und die neuen sozialen

- Bewegungen. In Bechmann, Gotthard(ed.), *Risiko und Gesellschaft* (pp. 375-402).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Kemp, R. (1993). Risikowahrnehmung: Die Bewertung von Risiken durch Experten und Laien - ein zweckmäßiger Vergleich? In Bayerische Rück (ed.), *Risiko ist ein Konstrukt* (pp.109-127). München: Knesebeck.
- Keplinger, H. M. (1991). Aufklärung oder Irrführung? Die Darstellung von Technikfolgen in der Presse 1965-1986. In J. Krüger & S. Ruß-Mohl (eds.), *Risikokommunikation: Technikakzeptanz, Medien und Kommunikationsrisiken* (pp. 109-144). Berlin: Edition Sigma.
- Knaus, A. & Renn, O. (1998). *Den Gipfel vor Augen: Unterwegs in eine nachhaltige Zukunft*. Marburg: Metropolis-Verlag.
- Kriesi, H. & Giugni, M. G. (1996). Ökologische Bewegungen im internationalen Vergleich: Zwischen Konflikt und Kooperation. In A. Diekmann & C. Jaeger (eds.). *Umweltsoziologie* (pp. 324-349).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Laotse (1988). *Tao te king. Das Buch vom Sinn und Leben. Übersetzt und mit einem Kommentar von Richard Wilhelm*. München: Diederichs.
- Luhmann, N. (1979). Öffentliche Meinung. In Langenbucher, Wolfgang R. (ed.), *Politik und Kommunikation über die Öffentliche Meinungsbildung* (pp. 29-61). München: Piper.
- _____ (1884). *Soziale Systeme: Grundriß einer allgemeinen Theorie*. Frankfurt a. M.: Suhrkamp.
- _____ (1986). Die Welt als Wille ohne Vorstellung. Sicherheit und Risiko aus der Sicht der Sozialwissenschaften. *Die politische Meinung*, 229, 18-21.
- _____ (1988). *Ökologische Kommunikation: Kann die moderne Gesellschaft sich auf ökologische Gefährdung einstell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_____ (1990a). *Soziologische Aufklärung 5: Konstruktivistische Perspektiv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_____ (1990b). *Die Wissen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 Luhmann, N. (1991). *Soziologie des Risikos*. Berlin. New York: de Gruyter.
- _____ (1998). *Die Gesellschaft der Gesellschaft*. Frankfurt a. M.: Suhrkamp.
- Noelle-Neumann, E. & Hansen, J. (1991). Technikakzeptanz in drei Jahrzehnten - in der Bevölkerung und in den Medien: Ein Beitrag zur Medienwirkungsforschung. In J. Krügers & S. Ruß-Mohl (eds.), *Risikokommunikation: Technikakzeptanz, Medien und Kommunikationsrisiken*. Berlin: Edition Sigma.
- Parsons, T. (1980). *Zur Theorie der sozialen Interaktionsmedien*. Opladen: Westdeutscher Verlag.
- Peters, H. P. (1990). Risiko-Kommunikation: Kernenergie. In J. Jungemann & B. Rohmann & P. M. Wiedemann (eds.), *Risikokonzepte - Risiko-Konflikte - Risiko-Kommunikation* (pp. 59-148). Forschungszentrum Jülich.
- _____ (1991). Durch Risikokommunikation zur Technikakzeptanz? Die Konstruktion von Risiko“wirklichkeiten” durch Experten, Gegenexperten und Öffentlichkeit. In J. Krüger & S. Ruß-Mohl (eds.), *Risikokommunikation: Technikakzeptanz, Medien und Kommunikationsrisiken* (pp. 11-66). Berlin: Edition Sigma.
- Radkau, J. (1989). Sicherheitsphilosophien in der Geschichte der bundesdeutschen Atomwirtschaft. In W. Gessenharter & H. Fröchling (eds.), *Atomwirtschaft und innere Sicherheit* (pp. 91-106). Baden-Baden:
- Raschke, J. (1987). *Soziale Bewegungen: Ein historisch-systematischer Grundriß*. Frankfurt, New York: Campus Verlag.
- Ruhrmann, G. (1991). Analyse von Technik- und Risiko- Berichterstattung - Defizite und Forschungsperspektiven: Kommentar zu Kepplinger. In J. Krüger & S. Ruß-Mohl (eds.), *Risikokommunikation: Technikakzeptanz, Medien und Kommunikationsrisiken* (pp. 145-174). Berlin: Edition Sigma.
- _____ (1996). *Öffentlichkeit, Medien und Wissenschaft: Was leistet Risikokommunikation?* Bonn: ZV-Verlag Service.
- Ruß-Mohl, S. (1991). Free Flow versus Hiding Hand. Anregungen zur

- zielgruppengerechten Risikokommunikation. In J. Krüger & S. Ruß-Mohl (eds.), *Risikokommunikation: Technikakzeptanz, Medien und Kommunikationsrisiken* (pp. 221-244). Berlin: Edition Sigma.
- Thiel, R. (2003.1). 60 Jahre Atomenergie bedeuten 60 Jahre Produktion von Atommüll. http://www.ippnw-ulm.de/text_gundremmingen-60jahre-atomuell.htm
- Thompson, M. & Schwarz, M. (1990). *Divided We Stand*. London: Harvester Wheatsheaf.
- Uhlmannsiek, B. (1998.6.7). Gegahren durch Brennelemente-Transporte? *StromDISKUSSION*, 5-12.
- Widerstand gegen die WAA Wackersdorf (1), (2) (1998).
<http://www.asamnet.de/oeffentl/bi/widerst1.htm>, <http://www.asamnet.de/oeffentl/bi/widerst2.htm>

(최초 투고 2004.03.01., 최종원고 제출 2004.04.03)

International Comparison of Nuclear Energy Conflict in Europe and Northeast Asia from the Viewpoint of New Social Movement

With an Emphasis on the Risk Communication

Seong-Jae Kim

Associate Professor,

Dept. of Journalism and Communications, Chosun University.

Today, nuclear energy conflict is caused from the dangerous radioactive material. The main party of this conflict are politic and economic systems which decide nuclear energy, and the persons concerned which it oppose and the anti-nuclear environment group. If the nuclear waste is transported from one nation to another nation, multi national anti-nuclear group appears as conflict party. We call this domestic and transnational risk communication new social movement. From the viewpoint of system theory, the new social movement can mean the offensive development of self-reference which withstand the “technicalization of communication” through the “symbolically generalized communication media” like money and power. By comparing Northeast Asia and Europe, the nuclear energy conflict did not show a big difference in the selection of nuclear waste storing site. In the Northeast Asia, when Taiwan exports the nuclear waste to North Korea, the international conflict broke out. In Europe, Germany has a hard experience with the construction-plan for the re-treating plant that produces the plutonium from the dangerous nuclear waste, and with the transnational transport of the nuclear waste. The new social movement aims the global paradigm which is able to guarantee the subtainability of ecological environment. The nuclear conflict in the “world risk society” is solved through the “discourse-alliance” which accomplishes sub-politics by crossing the border of class, nation and system.

Key words: risk society, new social movement, risk communication, nuclear energy, world risk society, discourse-alliance, sub-politics